



선거 이후 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

1. 여권의 힘이 강해진 21대 국회

- 지난 주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 여권(민주+시민) 측이 180석을 확보하는 결과를 도출
- 현 국회법 상 180석 이상의 의석 확보는 예산 및 법률안 처리, 고위 인사 임명 동의 등에 있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

2. 민주당이 제시한 공약 내용

- 과거 총선 전후의 증시 흐름을 살펴 보면 총선 이벤트 자체가 특별한 변곡점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이번 선거의 경우 여당의 정책 추진 능력이 상당히 강해진 상황인 만큼 정책 지향점에 대해 살펴 보는 것은 향후 투자 아이디어 도출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
- 공약집을 참조하면 5개 핵심 가치를 위한 10개 정책 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지속 가능사회와 관련된 환경 정책에 특히 관심

3.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는 점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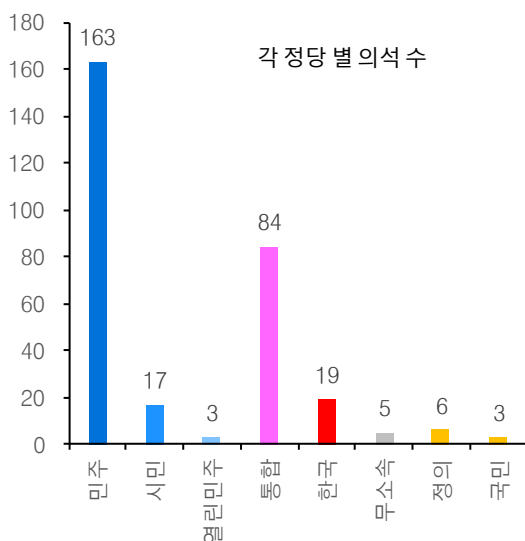
- 세부 정책 공약에서도 민주당과 시민당은 그린뉴딜 정책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 이는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를 목표로 추진되는 환경 정책
- 환경 정책의 강화는 비단 우리 정부만의 이슈는 아님. 유럽의 경우도 그린딜 프로젝트에 입각한 산업 정책을 추진 중이며, 미국도 민주당의 경우 그린뉴딜 정책을 당의 기본 환경 정책으로 설정
- 우리 정부의 정책 의지 및 추진력 제고, 그리고 글로벌 주요 경제권의 정책 의지가 공통적으로 향하는 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

1. 여권의 힘이 강해진 21대 국회

지난 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현 여권(민주+시민)이 전체 의석 수의 60%인 180석을 확보했고, 열린민주당까지 포함 시 183석이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합계 103을 확보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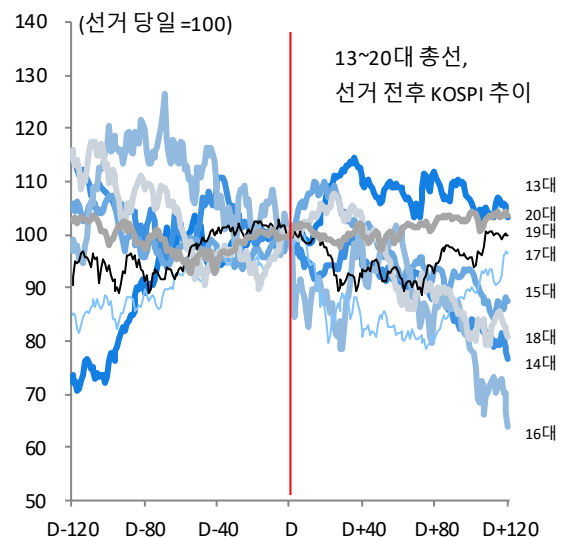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회법 상 180석 이상 확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법률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적의원 3/5가 동의할 경우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 소수당의 무기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필리버스터의 경우 재적의원 1/3 이상 동의 하에 발동할 수 있지만, 재적 의원 3/5 이상이 반대 할 경우 24시간 이후 토론 중단이 가능하다. 더불어 국회의장 그리고 주요 고위 인사에 대한 임명 동의안 역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국회법 상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당선된다. 기타 정당에서 교섭단체 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결국 재적 의원 수의 2/3의 동의를 필요한 개헌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법률안의 처리에 있어 현 여당은 크게 방해 받을 것이 없는 상황이 마련된 것이다.

[차트1] 21대 국회는 현 여권이 막강한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180석을 차지하게 된 상황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매과거 총선을 기점으로 살펴 본 KOSPI 흐름. 총선 자체가 의미 있는 모멘텀 역할을 한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민주당이 제시한 공약 내용

앞서 그림2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총선 이후라고 해서 딱히 증시에 있어 의미 있는 변곡점이 출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당의 승리나 야당의 승리 등으로 케이스를 나누어 봐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특히 지금 상황은 단순히 국내 정치권의 움직임 만으로 큰 흐름이 결정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번 총선의 경우 여당의 정책 결정 능력이 매우 강해질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된 상황인 만큼 정책 측면에서 현 여당의 정책 지향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향후 업종 및 테마 측면의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월 23일 더불어 민주당이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공약집을 보면 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 라는 5개의 핵심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10대 정책 과제와 177개 세부 실천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10대 정책 과제와 거기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해 두었는데, 이 중 중장기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특히 관심있게 볼 만한 항목으로 지속사회와 관련된 환경정책 부문을 주목해 보자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차트3] 더불어 민주당이 3월 제시했던 공약집을 보면, 5개의 핵심 가치와 10대 정책 과제가 제시되어 있음. 이를 통해 정책 기조를 유추해 볼 수 있을 듯

가치	정책과제	주요 내용
혁신	혁신성장	•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중견기업 성장 촉진, 스마트 공장/서비스 확대, 소프트웨어개발 육성, AI 개발 육성,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벤처투자 활성화, 금융혁신추진 등
	미래혁신	• 청년종합 정책, 교육 개혁, 직업 교육 강화 등
공정	공정사회	• 대중소기업상생, 노동자보호, 공정한입시 등
	정치개혁	• 법원개혁, 국회개혁, 주민자치 확대, 경찰개혁 등
포용	균형발전	•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역균형발전 등
	민생활력	• 청년신혼부부 맞춤형도시, 전국 무료와이파이 등
	포용사회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금 부담 경감, 보육강화 등
안전	안전사회	• 감염병 대응 강화, 여성안전, 보행자 교통안전 등
	지속사회	•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세제지원 강화, 에너지 분권 기반 마련, 수소경제 활성화 등
평화	평화안보	• 신남방 및 신북방, 스마트 정예강군 육성 등

자료: 더불어민주당,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는 점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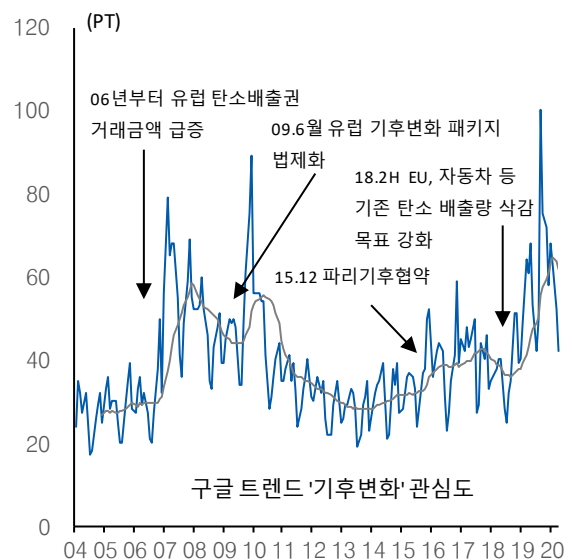
선관위에 제출한 정책 목록을 보면 민주당과 시민당 모두 그린뉴딜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2050년까지 탄소 제로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분야 투자 확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미래차와 전후방 연계산업(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등)육성, 녹색경제 관련 투자 유인 등을 구체적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단기에 시세를 분출하고 마무리되는 테마주에서 벗어나 중장기 추세로 이어지는 테마의 조건 중 하나가 정책 지향점과 글로벌 트렌드의 일치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보다 구체화된 정책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유럽 의회도 그린딜 프로젝트에 합의하고 올해 후속 조치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로 정책 기조 훼손 우려가 생길 수 있는 시점이나 유럽의회는 코로나가 환경 정책 후퇴의 빌미가 되어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이를 접목한 산업정책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국도 트럼프에 가려져 있지만, 민주당 측은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그린뉴딜 정책을 당의 기본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 경제권 정부들의 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힘을 얻게 된 한국 여당의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친환경 테마에 대한 관심은 필요해 보인다는 판단이다.

[차트4] 민주당이 제시한 환경정책, 유럽과 마찬가지로 2050년 탄소 제로를 목표로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을 계획

항목	내용
목표	2050 탄소제로 사회 실현 2040까지 미세먼지 농도 40% 이상 감축 - 기후관련 투자 확대, 저탄소 산업혁신 추진 - 에너지분권체계 구축
이행방법	2050까지 탄소중립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추진 - 석탄발전 감축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저탄소 스마트 산업 조성 - 미래차와 전후방 연계사업 육성 - 녹색경제 투자세제 혜택 - 탄소세 도입 검토
이행기간	2020~2024년 단계별 추진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 확대, 국비/지방비/기금 활용

자료: 선관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5] 과거 주요 이벤트들이 등장했을 때 이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던 상황



자료: Googl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